

코스피 28P
1,113
환율 41원
1,291



금융시장 '숨 고르기'

증시 이틀째 상승...환율은 반등 조정 양상

국내 금융시장이 전날 가파른 회복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증시는 전날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등의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환율은 반등하는 등 조정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8.34포인트(2.61%) 오른 1,113.06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달 22일 이후 7거래일 만에 1,100선을 회복한 것으로, 증시가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찾고 있다. 또 코스피는 오전 9시21분께 선물가격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11.98포인트(4.05%) 상승한 308.03으로 마감돼 6거래일 만에 300선으로 올라섰다. 이날 증시는 외국인들과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다. 외국인들은 3천 244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사흘째 '사자' 행진

을 이어갔다. 반면 외환시장은 사흘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1.00원 급등한 1,291.00원으로 마감됐다. 금융시장 회복세에도 환율이 급등한 것은 전날 177원 폭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전날 금융시장이 사상 최고의 높이뛰기를 선보인 부담감으로 국내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실물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본국적인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물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도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30일 기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는 5.59%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보다 1.25%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사상 최대 하락 폭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항공편 증편 항공운수권 추가 해달라”

전남도, 국토해양부에 정부 자원 특별 지원 건의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항공편 증편과 항공운수권 추가 등의 특별지원에 나서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건의서에서, 과포화상태인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노선 중 일본과 동남아 노선 2~3편의 기착점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유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 무안~김포 항공편을 1일 2회로 증편하고, 운항시간도 이른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으로 조정해 지역 상공인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수도권 출장업무에 당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상륙을 경유해 제3국 공항까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줌으로써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제고 및 동북아 중

류 중심공항으로 육성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전남도가 이처럼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재 아시아나 항공에서 운항중인 무안~김포 1개 노선이 더 이상 늘지 않는 데다, 대한항공에서 주2회 운항하던 무안~제주 노선이 최근 운항을 중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공항 활성화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구성, 국내외 저가항공사 취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 중개물류회사 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올라서려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순천에 축분 발전시설 완공

〈고효율 축분 바이오가스 플랜트〉

전남도, 첫 민자 유치...하루 분뇨 20t 이용 1천kw 전력 생산

순천에 돼지 분뇨를 활용해 하루 1천k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축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이 완공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순천 정림산업에서 박준영 도지사과 축산농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준공식을 했다. 이날 준공된 고효율 축분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총사업비 12억이 투입돼 하루 5천500마리의 돼지에서 발생하는 분뇨 20t을 활용해 1천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전남테크노파크의 '스타기업 3호' 기업인 정림산업은 독일 바이오가스 전문설비 기업인 'LIPP GmbH'와 기술 독점계약을 체결해 발전설비의 시공기공을 마쳤다. 이 시설은

해양부기가 금지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한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도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잔여물도 비료까지 생산함으로써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자원순환형 분뇨 처리시설이다. 국내에선 4~5곳에서 축분을 이용한 고효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시범 추진한 곳은 있지만 민자를 유치해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축산분뇨를 활용한 이 같은 발전설비의 효율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에 시설보조금과 융자지원 확대, 발전 차액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건의하는 등 보급에 앞장서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서민은 언제나 이 방법 뿐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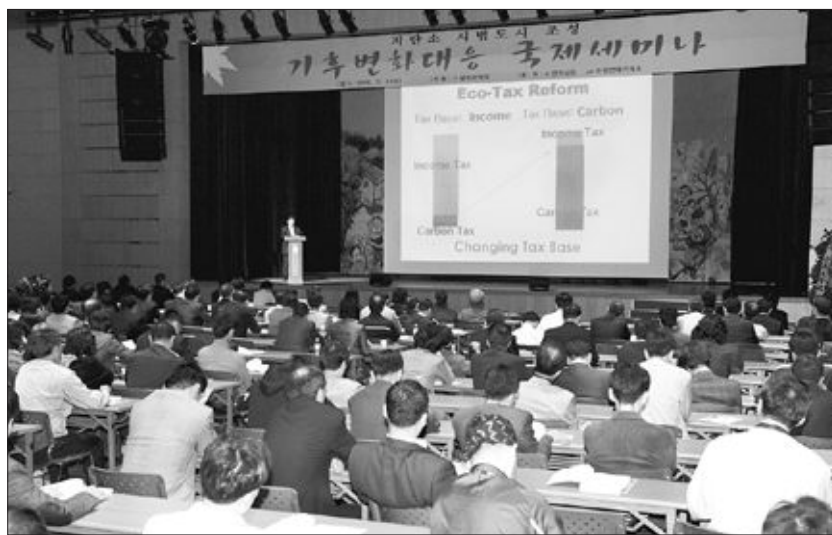
“건설사 부도 때 협력업체 채무 유예”

정부, 건설업체 부도 위기 대책...금융기관에 자금지원도 권고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 하도급업체는 금융기관 채무의 상환이 유예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일부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와 관련, “주택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공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고 이 업체의 회수 가능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채권단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걸리는 대한건설공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해외발주 공사장의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면 국내 다른 건설업체가 대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의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받은 계약자는 피해가 없다”며 “수익성이 없어 중단된 공사의 경우 공동 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의 대형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 국제세미나



광주시가 주최한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 기후변화대응 국제세미나'가 지난달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김정인 중앙대 교수, 카루모 코바시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원 연구관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이란 주제로 열렸다. /위석림기자 jrwi@kwangju.co.kr

“생태경제” 고려한 국가성장을

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주제 발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성장의 목표를 '생태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래권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사는 31일 광주시 주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국제 세미나에서 '저탄소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사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안보를 다질 수 있는 국가 전략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사는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가 경제적 가치만으로 국가성장을 가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산화탄소 저감, 에너지 사용 절감대책 등의 생태비용과 그 효율성이 고려된 '생태경제 효율성'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할 때”고 설명했다. 그는 “생태 경제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환경세계 개혁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장 토니 클렘슨이 '영국과 EU의 기후변화대응', 임마누엘 에드워드 싱가포르 아시아카본(ACX)의 탄소배출권 거래팀장이 '탄소거래 최신정보 및 동향'을 주제 발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면 '비수도권 반발'서 계속

민주당 등 야당은 비수도권 지자체 등과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조만간 모임에 갖고 정부에 철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4일 전체 회동을 갖고, 서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한 실행행사와 함께 '수도권 집중화 저지 특별법' 제정 등

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엔 골똥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남과 전북, 대전,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 광역의회는 이날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상의, 경실련 등 지역 경제계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수도권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 설

역사교과서 '5·18' 수정권고 경계한다

역사교과서에 실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좌편향' 주장이 제기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5·18' 기술내용을 포함, 55건의 수정 권고를 내렸다. 수정 교과서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과부의 '5·18' 관련 수정 권고안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부분이다. '민족민주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는 '청소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내놓은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 '민족민주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민주화운동'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18이 '오월에서 통일

로'라는 구호에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 전반에 '민족'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계기가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5월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5·18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법령을 지정된 마당에 검찰이 5·18사료를 인용한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정도다. 5·18에 대한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단어 하나 하나에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5·18을 포함, 교과서 수정은 신중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끌어 고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 '좌편향'을 바로 잡으려다 '우편향'의 일방적 교과서를 내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전거 조례' 앞서 전용도로부터 개설해야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등록제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뒤늦은 조치지만 환영한다. 자전거 이용은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교통수단이다.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개인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광주시의 자전거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지난 95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시 2010년까지 214개 노선, 381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도로는 없다. 그동안 151개 노선, 200여km의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지만 레저는커녕 출퇴근을 하러 해도 사고를 무릅써야 한다.

인도에 설치돼 형식적인데다 불법 주차차와 상가 물품에 밀려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변두리와 광주전역에 조성된 5개 노선의 자전거 전용도로도 관리도 매우 허술하다. 광주시는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 없는 전용주차장 건설이나 무료 자전거 공급 등은 예산안 축내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마당에 어느 누가 위험천만인 자전거를 이용하려 하겠는가. 서울, 창원, 부산 등 다른 도시를 흉내내는 것이라면 그만 두는 게 낫다. 서울시는 외곽에서 도심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광주처럼 인도에 선을 긋는 '장식용' 수준이 아니다. 광주시는 자전거 조례를 제정기로 한 만큼 서울시의 정책을 본받기 바란다.

“직불금 덮은 감사원이 문제”

행안부장관 지방 공무원과 대화 2010 지방선거전 행정체제 개편



원세훈(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신청·수령 파문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해 직불금 감사를 벌이고도 제도 개선 없이 덮고 넘어갔던 게 문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신청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여태껏 본 바로는 부당 수령·신청자는 거의 없으며 99%는 밤을 밀한 분들이 받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덮자 국민들이 '얼마나 문제가 컸으면 그냥 덮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직불금 감사가 이뤄졌던 참여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대도시에서는 직불금 제도가 뭔지 모르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정도”라며 “지난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면 얘깃거리도 안 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가 신뢰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전남·북, 제주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 또는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 민주주의의 전당 유치(광주) ▲ 분권교부세 상향조정(전북) ▲ 골프장 재산세 세수감소 문제(제주)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독신침·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